



「新경제」를 위한 에너지·자원 정책

이자료는 지난 6월 22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에너지협의회 주최 에너지
관련인사 간담회에서 행한 강연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註)



朴 在 潤
〈통상산업부 장관〉



1. 「신경제」와 세계화

가. 「신경제」의 지향

정부는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집행하기 시작한 이래 재정제도, 금융제도, 경제행정규제 및 경제의식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발전메카니즘의 근간으로 하여 성장해 왔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도록 지시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경제발전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사람들의 의식도 민주화됨에 따라 이제 그와 같은 발전메카니즘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이, 80년대 초반에는 경제자유화가 추구되었으나, 당시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만 민간주도로 운영되거나 자율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후 80년대말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저해적인 작용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주의가 가져다 준 개인의 자유가 과소비, 노사분규 등 개인적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신경제」에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 대신에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경제발전 메카니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 각자의 참여와 창의로 연결하여 권위주의체제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규제 완화와 경제정의 확립을 위해 재정제도, 금융제도, 경제행정규제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① 재정개혁은 재정의 형평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며,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조세포착율을 높이며, 재정지출중 인건비, 소득보상적 지출 등 고정적 지출의 비중을 낮추어 가고 있다. 그 결과 92년에 비해 94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5%로,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은 17.3%에서 25%로, 재정지출에서 고정적 지출의 비중은 65.7%에서 59.3%로 개선되었으며, 그밖에도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신설,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② 금융개혁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의 모든 결정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율화,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개방화, 그리고 자율화와 개방화에 따른 금융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한 金融節度의 확립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금리자율화,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 정책자금의 축소 등 중요한 금융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제행정규제개혁은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규제방식을 전환하여 정부부문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토지이용에서부터 공장설립, 생산, 유통, 수출입 및 가격 결정단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제행정규제중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환경·산업안전·보건의료부문 등 규제가 오히려 강

화되어야 할 분야에서는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 총 1,469건의 규제완화 대상과제 중 1,320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과 토지이용·개발 등 1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는 각종 제도의 폐지나 간소화를 통한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직접규제를 간접규제(예:가격관리)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예:환경)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개혁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참여와 창의를 국민의 의식에 직접 호소하는 의식개혁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직접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창의를 직접 유발하지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의식개혁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경제의식개혁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언론·소비자단체 등의 시민운동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세계화의 의식

지난해 대통령의 「시드니구상」에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세계화가 제시되었다. 세계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발전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일류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로 이행해 가는 「지

구촌화(Globalization)」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일류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신경제」는 대체로 金泳三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추진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고,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만들자는 것이다. 반면에 세계화는 「신경제」를 통하여 다져진 경제발전의 기초 위에서 보다 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다.

세계화를 위해 정부는 교육, 법질서, 정치와 언론, 행정과 지방, 환경, 문화와 의식 등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① 교육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개인의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경쟁원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② 법질서를 세계화하여야 한다. 기초질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행위준칙으로서의 법의 지배가 정착되어야 한다.

③ 정치와 언론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언론도 사회의 公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행정과 지방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 「똑똑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⑤ 환경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차세대들이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환경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⑥ 문화와 의식을 세계화하여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에 나아가 세계인들과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자세와 의

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에너지·자원 정책의 여건과 기본방향

가. 세계 정세 및 전망

1990년 걸프전쟁 이후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세계의 전반적인 정세는 겉으로는 안정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실제로 그 표면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수요 측면에서는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특히 중국, 동구 국가 등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 석유시장이 안정되어 전반적으로 평온한 듯이 보이나 아직도 OPEC와 같은 자원보유국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 자원 부재 지역의 편재성, 부재량의 유한성 및 생산의 비탄력성 등 세계 에너지시장이 지니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66%는 중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OPEC의 12개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 집중도는 77%에 달한다. 또한 전세계적인 매장량은 1993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석유는 43년분, 천연가스는 59년분, 석탄은 240년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이 안된 추가 매장량을 감안하더라도 개도국 및 구공산권 국가의 급격한 수요증가를 계산에 넣는다면 사용가능년수는 더욱 단축될 것이다.

최근의 국제 석유시장 동향을 보면 이와 같은 요인들이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1/4분기의 경우 석유수요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반면, 공급량은 OPEC의 감산 등으로 인해 수요 증가를 따르지 못해 국제 유가는 지난 해보다 약 3~4불정도 상승하였다.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석유금수조치 해제여부가 변수

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같은 유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94년 3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세계 에너지수급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주로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대문명과 경제사회발전의 기저를 형성해 온 화석에너지 주도의 세계 에너지수급 체계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에너지업계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나. 국내 여건 및 전망

세계 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수출·투자 등 모든 면에서 활력에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에는 8.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수출은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1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그동안 저조했던 설비투자도 23.3%에 이르는 신장세를 보였다. 또한 금년 1/4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9.9%를 기록하고, 수출은 31.7%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도 25.2%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신경제5개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었고, 아울러 기업인·근로자·국민 모두가 땀흘려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측면에서도 작년은 상당히 의미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8.2%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의 효과 등으로 인해 에너지소비증가가 구조적인 안정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소비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으로서 10년후인 2005년의 총에너지수요는 현재의 약 1.7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국내 여건에는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환경관련 부담이 증대될 것이다.

②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가스·전기 등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에너지로의 전환이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③ WTO체제의 출범으로 경제의 개방화가 촉진되고 해외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제 우리 에너지산업도 그간 정부의 보호와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쟁력강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④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발전소·정유시설·석유비축시설·가스배관망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이상 너그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시설은 안전에 취약한 부분으로서 그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에너지·자원정책의 방향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차질없이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 그리고 양적 확대에 치중한 에너지·자원정책은 높은 석유의존도, 낮은 에너지이용효율, 에너지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시장기능의 위축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新경제」의 에너지·자원 정책은 경쟁촉진과 수급 안정을 바탕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저렴하면서도 질이 높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21세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에서 과감한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생적인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수급의 안정과 환경과의 조화에 역점을 두며, 국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가. 경쟁촉진을 지향하는 정책

앞으로 에너지·자원정책은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만을 유지하는 선에서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① 그동안 석유수급의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 고시와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제 등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 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격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② 급속한 수요증가로 인해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체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③ 그간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거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조정시에는 민자발전 사업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안정공급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와 아울러 수요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① 80년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전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전력의 경우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하절기의 전력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발전설비 등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입지확보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② 석유와 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해 도입선다변화

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정유시설·장거리송유관·가스배관망 등 공급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상시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시설도 계속 증설하여 선진국수준의 비축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통상산업부가 주축이 되어 중동 산유국 등과 자원의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을 추진하여 비상시에 선진소비국과 석유를 융통하는 등 에너지소비국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③ 입지·투자재원 등의 제약으로 에너지공급시설을 무한정 늘리기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수요관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가격의 수요관리 기능을 더욱 제고하고,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사들의 수요관리를 위한 투자확충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계속 노력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촉진 등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금년 여름의 경우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전력예비율을 7% 이상 유지함으로써 전력의 안정공급에 힘을 쏟을 것이다.

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

우리를 둘러싼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에너지(Energy)의 3E가 상호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지하는 동시에,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최대한 촉진해 나갈 것

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총에너지의 3%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한 민간의 관심부족으로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는 못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금년중에 서해안의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다.

② 석탄·석유 등의 기존연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천연가스의 보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련 비용부담을 에너지가격에 내재화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에너지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방법에 의해 비용화하여 이를 에너지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줄여 나갈 것이다.

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지속시키고 앞으로 발생가능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등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① 급속히 수요가 줄고 있는 국내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감산을 추진하되, 이와 아울러 대체산업 유치 등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 (가칭)「폐광지역개발촉진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② 「자연적인 자원빈국」에서 「인위적인 자원부국

이 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금년에 이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미수교국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자금의 확대,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세계상의 혜택 부여 등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③ 전력산업, 정유산업, 지역난방사업 등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에너지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에너지사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전면 보강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활의 안전이며,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①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새로운 가스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시설점검 위주의 현행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사업자가 韓國가스安全公社의 심사를 거쳐 개선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평가받도록 하며,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등 외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총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최고경영자로 격상하고 체계개선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15km마다 1명의 안전점검원을 채용토록 하는 한편, 배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2000

년 이전까지 가스배관도의 전산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가스안전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현재 실시중인 법정검사외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가스용품의 안전도 향상과 품질의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②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수·화력발전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도록 하고, 유흥업소·시장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신력있는 국제전문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 등에 의뢰해서 보다 심도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광산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업체별로 재해발생 정도에 따른 정부의 차등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금년부터는 폐광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것이다.

4. 에너지·자원 업계의 역할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의 틀이 바뀌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남보다 한 발 앞서 변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과 산업만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의 에너지·자원산업도 경쟁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보호와 규제의 틀속에서 성장해 온 에너지·자원산업도 이제는 냉혹한 무한경쟁의 도전을 뿌리칠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계화시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산업인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① 우선 과감한 경영과 서비스 혁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인 여러분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하다.

②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에너지·자원 산업 인들과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가 96%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결국 에너지·자원 산업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방대한 투자소요, 장기간의 투자회임, 높지 않은 성공확률 등으로 인해 위험도가 큰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크다는 것이 투자론의 평범한 진리인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전이 요청되고 있다.

③ 이제 에너지·자원 산업인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기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역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는 우리의 에너지 산업에게 하나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이므로 남보다 한발 앞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국토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④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시설의 입지와 투자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사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에너지공급사에서 수요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에너지공급사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바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⑤ 작년말의 아현동 가스사고와 금년에 발생한 대

구지하철 가스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스나 전기 등 고급에너지는 사용이 편리한 반면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에너지 관련시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정부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⑥ 에너지·자원산업에 있어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경영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인간경영을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산업은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신

념 아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산업에 귀감이 되어 왔으며, 이 기회를 빌어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에너지산업은 공익성이 강하므로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 산업평화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힘과 뜻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가 이 만큼 성장하기까지에는 에너지·자원업계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세계화시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세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진의 대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 ♣

□ 용 어 해 설 □

심포지엄·세미나·포럼·연찬회

최근들어 각 학술단체나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세미나·포럼·연찬회등의 안내기사가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갖는 의미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아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과는 동떨어지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 **심포지엄(Symposium)**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습방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두명 이상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낸 뒤 청중 질문에 대답하는 토론방식이다. 특정주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집단 강연식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세미나(Seminar)**는 독일의 대학에서 도입한 교육 방법의 하나다.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결론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해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포럼(Forum)**은 로마시대의 도시 광장을 일컫던 포룸(Forum)에서 유래된 것이다. 로마시대의 포룸은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연설·토론하는 장소였는데 오늘날의 포럼도 자유토론에 가장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토론자들의 발언과 함께 질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포지엄과 형식이 비슷하나 토론자간 혹은 청중과 토론자간에 활발한 의견 개진과 충돌·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격이 판이하다.
- **연찬회**는 글자 그대로 연구하면서 식사하는 모임이다. 대체로 주제 발표자가 말하는 동안 식사하고 발표가 끝나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침 일찍 열리면 조찬회가 된다.